

# 보호·감시 없고 음험한 목인 예사

마을 범죄 공범들 빌각돼도 서로 쉬쉬…성폭력 재발 불러

## 성범죄 사각지대 농촌 장애여성

〈상〉 성폭행 사실상 방치

지난 3월 무안군 한 마을에서 정도(62)씨가 지적장애인 남매를 수차례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B(26·지적장애 3급)씨와 B씨의 여동생(22·지적장애 2급)을 성추행한 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매번 5000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올 초 강원도 인제에서는 장애여성 성폭력 혐의로 주민 1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최근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장흥군의 한 마을 주민 수십 명이 지적장애 여성 한 명을

수년간 성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2007년 199건,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2010년 320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27건, 올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광주 7건, 전남 12건 등 20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주로 장애인 복지기반시설

3864명에 이른다. 또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지적장애인만 4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상담하고 보호·관리는 기관은 광주 2곳, 전남은 1곳이다. 또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보호하는 원스톱으로 미약한 농촌에서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 자체를 경계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전문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도 허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지적장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저항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리기도 곤란해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을 것이라는 집단심리가 작용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외부 감시가 취약한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에 범죄가 발생해도 은폐하기 쉽기 때문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남여성장애인연대에 따르면 2011년 전남 지역에만 여성 장애인이 6만8059명이며 이 중 지적장애인이

6천명이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미진 소장은 “지적장애 여성들의 경우 보통 가정형편이 어려워 하루 종일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는 물론 주의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고, 성폭력을 조장·묵인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1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 앞에서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발표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한 뒤 지난 48일간의 천막농성을 마무리하며 농성장을 철거하고 있다.

## 장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 무조건 처벌

“이젠 사회복지법 개정 힘 모을 것”

### 대법원 양형위

유치원이나 아동 보호시설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또 장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처벌하고, 남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별도 처벌기준을 만든다. 이는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아동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사법부가 형량을 대폭 강화한 양형기준이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

수)는 21일 오후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양형기준 강화안을 논의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종전까지 여자 아동·청소년으로 국한해온 성범죄 대상을 남자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하면 경위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보호시설 종사자가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게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 인화학교 대책위 농성 끝내

인화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48일간 천막농성을 진행해온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인화대학위)가 우석법인 인가취소 최종통보와 함께 21일 천막농성을 끝냈다.

인화대학위는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발표와 함께 천막농성을 마무리하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화대학위는 “지난 18일 광주시의 우석법인 인가취소 최종통보와 함께 48일간의 천막농성을 정리한다”며 “앞으로도 법과 제도적으로 사회

복지시설 내 인권유린 사건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용복 상임대표는 “그동안 인간적인 장애인의 삶은 없었다.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됐다”며 “이번 노력의 완성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학국 광주시교육감은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인화학교 부지는 장애학생을 위한 체험학습장,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장 등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며 “앞으로도 법과 제도적으로 사회

## 선수 스카우트비로 쓴 장학금

우수 선수 영입 돈거래 축구부 감독 등 입건

축구 선수 부모들에게 전달된 군민 장학금을 선수 스카우트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중학교 축구부 감독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기량이 우수한 축구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로비 자금을 건넨 강진 모 중학교 축구부 감독 김모(29)씨를 배임증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선수를 중학교로 보낸 광주 모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이모(40)씨를 비롯해 강진, 완도, 영광 지역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6명도 배임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학교 축구부 감독 김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6명에게 우수 선수 스카우트 명목으로 각각 200~500만원씩 건네는 등 모두 2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맡고

있는 중학교 축구부의 2005~2006년 성적이 부진하자 우수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로비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강진군장학재단이 선수 1인당 학부모에게 매년 100만원씩 지원한 장학금을 다시 돌려받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은 학교측에 보고하거나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축구부 운영에 로비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축구 선수지도, 육성에 사용돼야 할 장학기금이 부실하게 사용됐다”며 “돈을 미끼로 선수들이 스카우트되면서 다른 선수에게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선재성부장판사 사건

###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서울고법은 법정관리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49) 부장판사 사건을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에 배당해 심리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법 관계자는 “애초 부패사건 전 담재판부에 배당할 것을 고려했으나 재판의 신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부장과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니지 않고 같은 법원에 근무한 적도 없는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형(55)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16기인 선부장판사보다 세 기수 선배다. 선부장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고 등장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9월 광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은 공정성을 더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고법에서 맡아달라”며 관할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14일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 “농사일 절반 직접해야 자경농 면세”

### 서울고법 판결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써서 직접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부장판사)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 용원(67)씨가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 한다’는 정의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예전 대법원 판례가 소유자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는 것도 직접경작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지만, 개정 시행령에서 의미를 분명히 정한 이상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씨가 1996~2004년 15, 16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당직을 맡았고, 양조업체 공동사업자로 매년 수천 만원의 사업소득을 낸 점을 고려하면 농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됐다거나 일부 비료, 종묘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8년간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1998년 취득한 남양주의 밭 4000여㎡를 2007년 양도한 뒤 5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이상 직접 경작했었다”는 정의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예전 대법원 판례가 소유자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 “병 고쳐 주겠다” 속여

### 피해자 집서 금품 훔쳐

광주북부경찰은 21일 민간요법으로 지병을 치료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믿게 만든 뒤 피해자들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최모(52·군산시)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9시께 광주 한 동 B여·50)씨의 집 패밀리함에서 시가 9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1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여친과 헤어진 20대

### 아파트서 투신 자살

20일 밤 10시7분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에서 오모(29)씨가 떨어져 숨져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경비원은 경찰에서 “갑자기 ‘妣’하는 소리를 들고 밖에 나가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씨가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힘들어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며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야한 낙서’를 한 철없는 20대 경찰서장.

○·2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임모(27)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중장로 한 미용실 외벽에 검은색 매직으로 ‘00씨 고객이랑 모델 좀 그만 다니세요’ 등의 낙서를 했다.

○·경찰조사에서 임씨는 “술에 취해 여자친구의 미용실에 찾아갔는데, 길바닥에 매직으로 놓아있기에 찾길에 낙서를 했다”고 뒤늦은 후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예약접수 중

#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 3급 공무원 시험 [국방부]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 한빛고시학원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직원부사관 9급 이간반 농어촌기술직 사회복지직 봄 강원대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